

이 자료는 04년 2월 24일(수)에 배포되었습니다. (주)에 배포되었습니다. (주)에 배포되었습니다.

해설자료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4. 2. 23.

농 립 부

“당신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I.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경위

- UR 이후 농업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 지속
 -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의거, 농업·농촌이 FTA, DDA협상, 쌀협상 등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 수립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국가 경영전략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
- DDA 출범을 계기로 준비해 온 중장기 대책안을 바탕으로 '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
 -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농업인의 날」)
 - * 「농정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와도 협의
-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 확정
- 앞으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평가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 조정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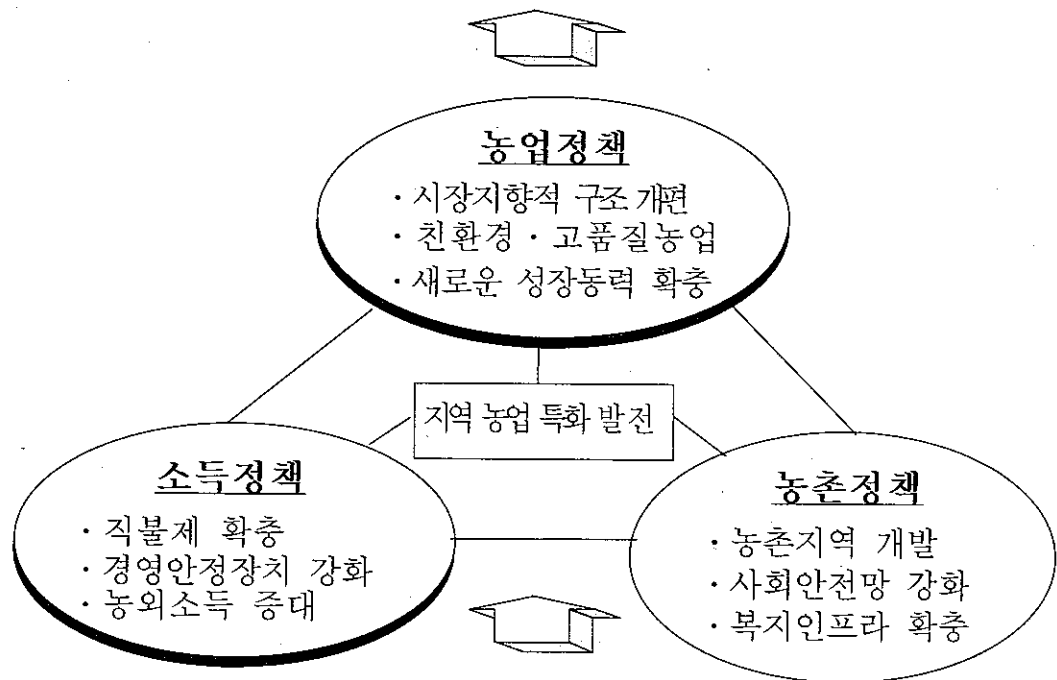
II.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기본틀

《비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 농업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 농 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정책 틀》



* 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의 분리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구조로 정착

《패러다임》

- ◇ 정책대상 : 농업중심 ⇒ 농업·식품·농촌
- ◇ 지원방식 : 평균적 지원 ⇒ 농가유형별 정책 차별화
- ◇ 정책수단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 농촌성격 : 농업 생산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Ⅲ.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농업의 체질 강화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농정환경변화에 맞게 쌀수매제, 농지·금융제도 등을 혁신하겠습니다.

□ 쌀산업은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 전체 생산의 50%이상을 담당

○ 2~5ha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화를 두배 늘려 총 164천ha 추진

- 규모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

* (현행) 289만원/ha, 1회지원 → (개선) 월 24만원/ha, 최장 8년간

○ 전업농이 되기 어려운 중소농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 RPC중심으로 품종선택·유통을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

□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공동마케팅,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소비촉진과 수급조절능력을 향상

○ 과수·시설채소·화훼는 기술집약적인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시장경쟁력과 자율 수급조절 능력 향상

□ 규모화가 이미 진전된 축산업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전업농 2만호가 축산의 85%이상을 점유

○ 축종별로 브랜드를 개발,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확대

- 한우 :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

- 돼지 : 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형 양돈업을 육성

- 닭 : 계열화된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 젖소 : 항구적인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우유 고품질화 추진

○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도축, 가공 공정별 위해 요소중점관리(HACCP)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스템 개편

○ 추곡수매제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쌀 재고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로 전환

- 2004년말까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도입근거 마련

○ 낙농진흥회의 원유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

□ 농지제도는 식량기반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촌활성화를 위해 소유·이용제도 및 전용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계획적·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 주말·체험영농(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 확대

○ 농지전용제도를 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수준도 인하 추진

※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중 농지법 개정

□ 농업금융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수익자 위주의 선진제도로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04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새로운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아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고, 기술·경영혁신, 수출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효율적인 물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현행 3%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본격 도입
 -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제로 정착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 ('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 채소·과일·쇠고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 도축·가공·유통 등 축산물 처리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쇠고기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규 정예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경영컨설팅 등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

○ 35세 미만의 젊고 의욕있는 **창업농**을 매년 **1,000명**(2013년까지 1만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자금으로 최고 2억원 지원

- 창업농 이외 매년 3,500명 수준의 신규인력에게는 경영능력 등을 심사하여 종합자금제로 영농정착금 지원

○ 현행 후계 농업인 제도를 **창업농 위주로 개편**하고 창업농 후견인 제도를 통해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05)

○ 농산물 유통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500명 수준 양성

○ 지역 농대교수를 생산·가공·유통의 연구와 지도 인력으로 활용

□ 일본, 중국 등 국가별·지역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강화하여 20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달성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선정부터 생산·수확후 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 추진('04)

○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는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 전략품목을('04 : 3품목 → '08 : 11) 대상으로 추진

○ 김치, 인삼 등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강화

3.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개방화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직불제를 확충하고 보험 등 경영안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관, 향토자산 등 농촌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농업소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형별 직접 지불제를 대폭 확충하여 2013년까지 직불제예산비중을 23%까지 확대

① 논직불제는 담수의무 등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

②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납부금과 보전수준을 다양화하고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로 내실화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DDA협상 및 쌀 협상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

③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④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사육밀도 감축, 분뇨 자원화 등을 조건으로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하여 실시('04)

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체결, 공동기금 조성 등을 요건으로 도입('04 시범실시)

⑥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농촌경관을 가꾸는 마을·지역단위 경관협약 방식으로 지원

□ 재해·가격 폭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농가 스스로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제도**를 강화

○ 재해보험을 과수 중심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가재보험제** 도입

- '04년부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전업화 수준, 재해발생 위험,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을 통합한 농업재해보험으로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08)

○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워크아웃 방식으로 회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04)**

- 회생 가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되 대상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사후관리를 강화

□ 주 5일 근무제 등을 기회로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외소득 비중을 67%로 확대('02: 54%)

○ 농촌관광마을 1,000개소를 육성하는 등 **농촌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

○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 **향토지적재산***을 향토산업으로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 * 각 지방 고유의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환경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식품, 주류, 염료, 도자기, 설화, 인물 등을 포괄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확대('03: 296개소→'13:394)**

-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집중지원(매년 20개, 총 194개 읍)
 -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 농어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한 권역 단위로 묶어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소도읍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1천개 권역)
 - 전원생활·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
-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개선
 -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 수변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
 - 빈집 철거 후 소공원, 마을광장 등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다양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을 도입
-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중점 추진
 - 각종 정보제공, 상담·알선,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 추진
 -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중과 배제 등 세제 개선('03)을 계기로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전개

5. 지역농업 발전

지자체, 지역농업인, 지방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수요를 실시간으로 점검·반영할 수 있는 농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은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 지역특수시책(특화작목개발 등)은 지역농업특구, 지역특화 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 예시 : 주산지 품목·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발전방안,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유지 방안 등
 -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기술 지도 등을 수행할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구성
 - 교육·훈련,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 특화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정책수립 단계부터 농업인·소비자를 참여시켜 농정신뢰를 확보하고 농정추진체계를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 육성
 - 농촌 선도농가 6만명을 네트워크화하고 5,200명의 정책 고객 시스템 효율적 운영

IV. 2013년 농업·농촌의 모습

농업 :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

-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고품질·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출시장 확대
- 쌀 전업농/생산비중 : ('02) 41천호/22% → ('13) 70/50
 - 축산전업농/사육비중 : ('02) 13천호/65% → ('13) 20/85
 - * 원예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발전
-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완화된 농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
 - 농업 GDP대비 쌀 비중 : ('02) 33% → ('08) 30 → ('13) 25

농업인 :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

- 1인당 도·농간 소득 비교 : ('02) 90% → ('08) 104 → ('13) 105
- 농가소득 구조를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
 - ('02→'13) : 농업소득 46% → 33, 농외소득 33 → 40, 이전수입 21 → 27
 - * 농외소득 비중('01) : 미국 91%, 일본 87%, 한국 54%

농촌 :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 * 농촌인구 비중 : ('80) 42.7% → ('02) 20 → ('08) 18 → ('13) 17(현 추세 유지)

V. 119조원 투융자 계획

1. 투융자 개편 방향

< 투융자 계획의 전제 >

◇ FTA/DDA/쌀재협상 등에 대비,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마련

◇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향후 10년 계획중 전반기 5년에 중점

* 투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소요,
융자는 농업인 등에게 상환을 전제로 지원해 주는 규모를 반영

□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개선

○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는 확대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

○ 시장원리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

-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여 융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 농림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성을 제고

○ 농업예산의 1/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투융자 사업비를 확충

○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

□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 3년 단위로 평가·조정

2. 총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

○ 예산 96조원(80%), 기금 23조원(20%)

○ 보조 89조원(75%), 융자 30조원(25%)

□ 전반기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

○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 보조 38조원(74%), 융자 13조원(26%)

※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3. 분야별 투융자 계획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	'08	%	'13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09	28.3	479	32.2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1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60	14.6	2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89	100.0	1,489	100.0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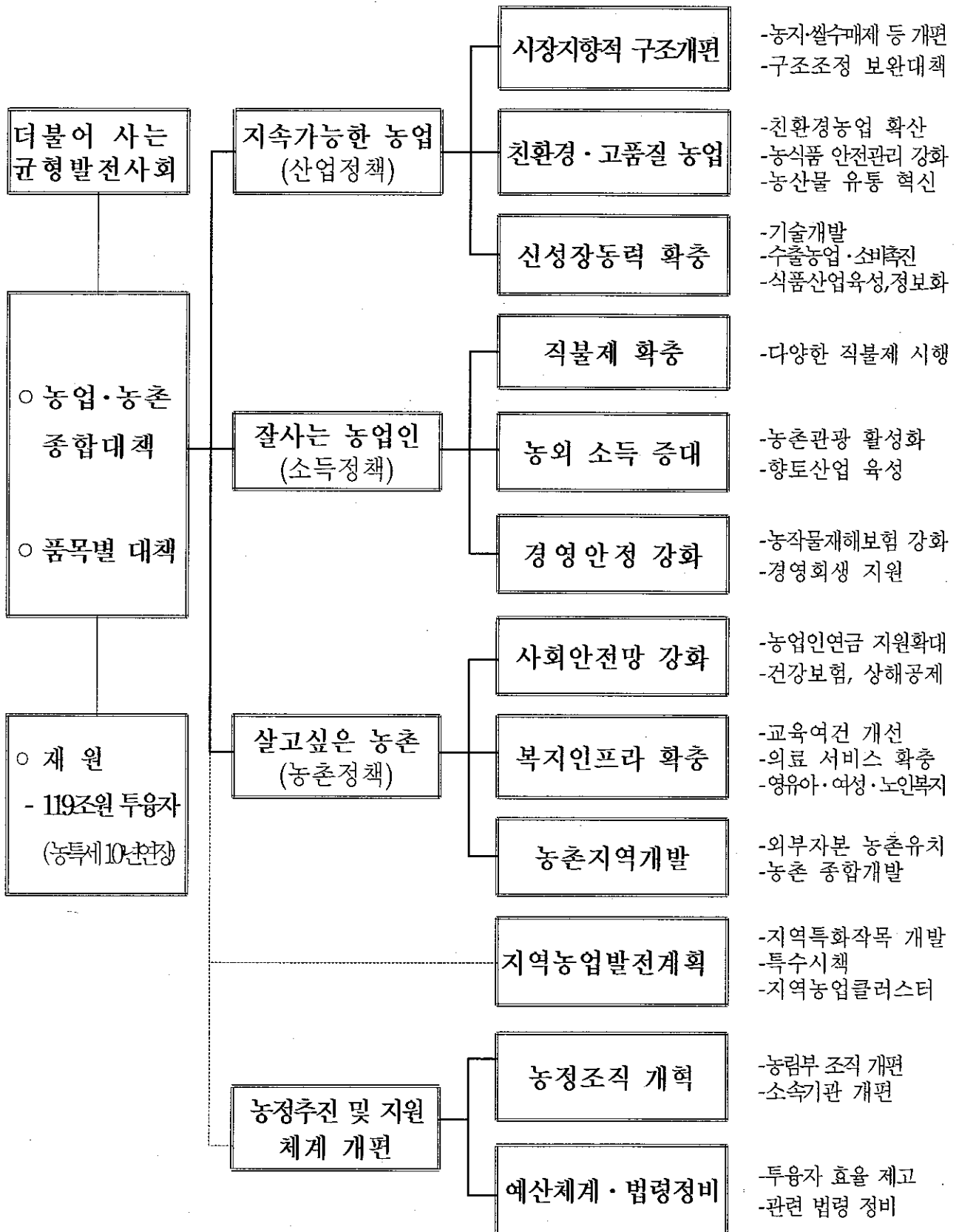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2013)
[1] 산업정책			
농업체질 강화	○농지제도 개편 ○경영이양 직불제: 연금 방식 개편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05)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06) ○농지은행제도 도입('05) ○진흥지역 밖 우량농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05)	
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	○유기질비료 공급: 60만톤 ○GAP 도입근거 마련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 ○산지공동마케팅 조직: 20개소	○친환경 농산물: 5%('05) ○70만톤('05)으로 확대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05) 후 전품목으로 확대('06) ○100개소('08)로 확대	○10%로 확대('10) ○150만톤으로 확대('13) ○200개소('13)로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05) ○농산물 영양성 표시제 도입('05)	○농식품 수출 50억불('13)
[2] 소득정책			
직불제 대폭 확대	○직불투융자 비중: 10.2%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 실시(25천ha)	○22.6%로 확대('08) ○경관보전직불제('05) ○생산중립직불제('06)	○22.9%로 확대('13)
경영안정 장치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포도·단감·복숭아 감귤 전국 실시 ○국가재보험제 도입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13)
농외소득원 확충	○농촌 관광마을: 32개 ○농공단지: 304개소	○74개소('05)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314개소로 확대('05)	○1,000개소로 확대('13) ○394개소로 확대('13)

	1단계(2004)	2단계(2005~2008)	3단계(2009~2013)
[3] 농촌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30% ○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50%로 확대('05) ○ 중위수 소득 기준 보험료의 50% 지원	○ 50%로 확대
교육·의료·복지 인프라구축	○ 고교생 교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03.1ha)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ha미만 농가 ○ 여성농업인센터 : 27개소	○ 전농가로 확대('05) ○ 2ha미만 농가로 확대('05) ○ 34개소('05), 163개소('08)	○ 전 농가로 확대('10)
농촌 지역개발	○ 소도읍육성 : 매년 20개소 ○ 농촌마을종합개발 : 16개 권역 ○ 주택융자조건 개선	○ 100개('05) ○ 경관협약 시행('05)	○ 194개소로 확대('13) ○ 1,000개권역으로 확대('13)
[4] 법령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 농지법 개정 ○ FTA특별법 제정 ○ 품질관리법 개정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 농협법 개정 ○ 양곡관리법 개정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05)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05)	
농가소득 안정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05) ○ 농촌관광촉진법 제정('0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 산지자원관리법 제정('06)	

[참고2]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Frame



[참고3]

과거 투융자 계획과의 차이점

	과거 투융자 계획('92~'02)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
배 경	○UR협상으로 시장 개방	○FTA, 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
범 위	○농림부(양청, 수산 포함)소관 예산· 기금사업비+타부처 소관 농특세 사업비 - 농특세 이외의 타부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제외 ○지방비·자부담 포함	○ 같음 * 다만 수산분야 제외 ○지방비·자부담 제외
투융자중점	○SOC 및 정부 직접사업(53%) * 직접지불 비중('03 : 9.4%)	○소득 및 경영안정(26%), 복지· 지역개발(14), 생산기반정비(13) * 직접지불(23%)
지원방법	○보조 63%, 융자 37%	○보조 75%, 융자 25%
재 원	○예산 86%, 기금 14%	○예산 80%, 기금 20%
계획 수정	○변경없이 시행	○3년단위로 평가, 재조정